

민주 “한국당, 투쟁도 국회서 하시라”

패스트트랙 지정 여진...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한국당 “장의투쟁 나설 것” 반발... 나경원 “재해 추경 수용”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함께 처리할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를 이어가면서 자유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와 협의하자’고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제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당장 오늘 오후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추경안 및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끌수록 (패스트트랙 안건) 논의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당이)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 된다. 여야 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투쟁도 격론도 국회에서 하시라”면서 “한국당이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로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한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5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 집회와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폭력과 폭압으로 의회 쿠데타를 자행한 문재인 정권이 뻔뻔하게 민생 국회 운영한다. 우리가 민생부터 챙기자 할 때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민생과 상관 없는 패스트트랙에 올인하더니 느닷없이 여론 호도용으로 민생타령을 한다”며 “정말 민생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국회를 노사 상태로 만들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동주택 공식가짜

인상과 탈원전 정책 등을 비난하며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만 뜯어가는 정권이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완전히 병들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당연히 제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뒷거래의 끝에 또다시 그들끼리 모인다고 한다. 기리기리 추악한 뒷거래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근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강연도 산불, 포함지진, 미세먼지 대책 등 재해 추경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해 추경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무일 “패스트트랙 민주주의 어긋나”

해의 방문 중 입장문... 靑, 검찰 내부 반발 여론 예의주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해의를 방문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정면 비판, 파문이 일고 있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있는 것은 간접

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선 건 처음으로 추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반기’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며 상황을 주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는 여론이 야심차게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 수장의 공개 반발로 논란이 확산, 동력이 약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쪽에서) 불만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할 줄은 몰랐다”며 “지금 뭐라 말하기 그렇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지명직 최고위 지명 ... ‘점입가경’ 바른미래

주승용·문병호 임명 지도부 사퇴 거부 재시사 바른정당계 “무효 소송 검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바른정당계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국회의장과 문병호 현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며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을 향해 “당의 화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에서 제기된 당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요구에 따라 사퇴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계, 나아가 국민의당계 일부의 퇴진론에 직면한 바른미래당의 ‘투톱’ 이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이는 바른정당계가 당을 깨고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제3의 길’을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주승용 국회의장이 격에 맞지 않은 최고위원직을 수락한 것은 제3지대를 원하는 당내 의원들의 뜻이 모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손 대표는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위원장을 최고위원 2명에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당무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이 합류한다 해도 의결 정족수(5명)를 채우기 쉽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 3명과 국민의당 출신인 김수민 최고위원은 공동임명문을 내고 “당헌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

명할 때 최고위원들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오늘 최고위는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손 대표의 임명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하태경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가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사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며 “최

고위원 지명 무효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결국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정면돌파에 맞서 바른정당계, 나아가 안철수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바른미래당의 운명이 달려질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58만명 돌파

민주당은 25만명... 靑, 두 사안 동시 답변할 듯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158만 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정부의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며 ‘동물 국회’가 재현된 데 대한 비판과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라는 제목의 청원은 여야의 물리적 충돌 직후이자 패스트트랙 지정이 임박한 지난달 29일 게시됐으며, 1일 7시 현재 25만 932명을 기록했다.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이달 29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야 한다.

앞서 한국당 정당해산 요구 청원은 지난달 22일 게시된 지 6일 만에 20만명이 동의했고, 이후 여야 충돌이 격화하자 30일엔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1일 오후 7시 현재 158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들 두 청원에 대한 답변 의무가 생긴 청와대는 같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시점에 한꺼번에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가리온지

“5·18 특별법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장병완 평화당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1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8일 이전에 ‘5·18외국처벌 특별법’과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해 9월에 이미 출범했어야 할 ‘5·18 진상규명위’ 구성을 위해 한국당에서도 조사위원 자격을 추가하

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또 “230여일째 구성조차 되지 못한 ‘5·18 진상규명위’를 하루 속히 출범시키는 일이 급선무다”면서 “한국당에서도 조사위원 자격에 대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출했으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전국대표 ☎ 1588-1543·010-3645-1479